

「보수」와 「진보」의 논쟁



前 수원대행정대학원장(공법학)

송희성

최근 어느 당의 정강 정책에서 「보수」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양측 입장」을 대강 살펴보자.

우선 「보수」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자초하기 쉬우므로 서서히 시간을 두고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즉 안정적 개혁이 바람직하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보듯이 휴전선 이북지역은 규범적(規範的)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므로 북한은 독립정부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등의 유지가 필요하다.

③ 창의와 근면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 자본주의를 취한 결과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국부 내지 국민 소득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벌들과 가진 자의 경제활동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고, 전 국민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보수파의 주장들은 이상 언급한 것 외에도 그 주장 내용은 매우 다양함을 긍정한다.

이 보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은 무엇에 연유하지는 정확히는 말할 수 없으나, 굳이 「정치적 동기」를 말하자면 선거에서 득표와 관련 지우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된다. 즉, 아직도 6·25를 충격적으로 겪은 세대들

이 많고, 최근의 「일련의 북측도발」에 대하여 적대심을 갖는 국민이 많으므로 냉전의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편견일까.

그 다음 이른바 「진보」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을 보자.

① 급격한 개혁이 혼란을 자초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정」은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개혁이 모순된 제도로부터 이득을 얻어온 세력에게는 혼란일지 모르나 대다수의 국민은 적극적 개혁을 원한다.

② 북한을 「법적 관점」에서 적대시 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국민들을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돕고, 「남·북통일」의 초석이라는 생각으로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자본주의가 창의와 근면을 요소로 하고, 「이윤동기」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배분적 정의(配分的正義)」가 실현되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복리국가」이념에 반하고, 그것은 「국가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요소로 하는 「진보」의 견해를 가진 측도 선거에서 득표와 유리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견 양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절대적·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안정적 개혁」, 「미래 지향적 보수」, 「모순을 개혁하는 보수」 및 「자유 민주주의 체제 옹호적 보수」를 내세우고 있고, 「진보」의 입장에서 극도의 혼란을 자초하는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의제 모순」을 개혁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남북이 대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 등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면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는 서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본다. 일찍이 독일의 라드부르 후(G·Radbruch)가 법제도는 합목적적이어야 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법적 안전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과 정책은 「국가목적」(공공복리 달성 목적·질서유지 목적)에 적합하고, 「정의」를 실현하여 우리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가 아니라 「가난은 나라가 구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비교 통계에서 나타난 제반 결점을 보다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간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도 않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들어난 모순」을 개혁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여도 「대기업, 부자」들만이 잘사는 나라이고, 중산층 이하의 국민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의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모든 현재의 모순 결점은 「그저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제거·변경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최근 정치인의 인적쇄신이 강조되는 것도 기존의 「가치관」, 「정책관」을 변경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와 「진보」가 다같이 「복리국가실현」과 「민주주의 체제」옹호를 주장한다면, 그 용어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라는 용어의 삭제는 민주주의를 주장 하는 당의 정체성을 흔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최근의 국민정서로서는 「보수」라는 용어가 반개혁적 성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